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적발당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겸 사용자로 20○○. ○○. ○○. ○○:○○경 인천광역시 ○○구 ○○○로 ○○○○자동차○ ○○ 앞에서 택배 운송을 한 사실이 민원신고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자 20○○. ○○. ○○. ○○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다. 이후 20○○. ○○. ○○. ○○경찰서에서 청구인을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확인하고, 20○○. ○○. ○○. 운행정지 ○ 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위반을 사유로 운행정지 ○○일(20○○. ○○. ○○ ~ 20○○. ○○.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20○○년 ○월말부터 택배업을 위한 준비로 차량구매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취득일 : 20○○. ○○. ○○.)하였으나, 택배업을 위한 차량 ‘배’ 번호판 취득신청기간이 청구인과 계약한 ○○택배 측에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가 20○○. ○○. ○○.경 동년 ○○. ○○.부터 신청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서류를 준비하여 ○○택배를 통하여 제출한 상황이었던 점, ② 청구인의 한 달

근무일수는 ○○~○○일 가량이며 휴무하는 경우 수입이 없는데, 그 중 ○○일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한 점, ③ 이미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배’ 번호판 신청기간 내에 벌어지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선처를 바란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취득해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차량(영업용)을 운전하기 위한 자격증일 뿐이므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적발 당시 ○○택배와 운송계약 체결 후 택배사가 ○○○○물류협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현황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였을 뿐 택배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한 사실은 청구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의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또한, 청구인이 택배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중이었다는 점,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 곤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 운행정지 처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제56조의2

####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적발당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겸 사용자로, 20○○.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현황 확인서를 택배사를 통해 ○○○○물류협회에 제출한 자이다.

2) 청구인은 20○○. ○○. ○○. ○○:○○경 인천시 ○○구 ○○○로 ○○○○○자동차○○○ 앞에서 택배 운송을 한 사실이 민원신고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 ○○. ○○.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다.

3) 위 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청구인을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위반을 사유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개월의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4) ○○○○물류협회는 20○○. ○○. ○○. 피청구인에게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택배)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운행정지 ○○일(20○○. ○○. ○○. ~ 20○○. ○○. ○○. )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20○○. ○○. ○○.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만 원 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 ○○.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를, 20○○. ○○.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본허가)를 통보하였다.

## 다. 판 단

###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하였으며, 같은 법 제56조2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경 택배 운송을 한 사실이 민원신고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〇〇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 경위 및 위반 횟수, 과실 정도, 경제사정, 택배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행정지 〇〇일의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

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